

# 노사정위원회 관련 일지

출범 전부터 지금까지의 노사정위원회 활동일지를 정리한다. 올해 들어 노동조합 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노사정위원회 활동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의 공과를 되짚어보자.

## 편집실

1997년

- 11.21 • 정부, IMF구제금융신청
- 12. 3 • 민주노총,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정3자기구' 요구(기본요구사항: 고용안정 대책, 경제위기 원인규명, 재벌 근본개혁)
- 12. 4 • IMF구제금융 합의
- 12.10 •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 12.11 • 민주노총 정책토론회(IMF구제 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12.18 • 대통령선거, 김대중후보 당선
- 12.24 • 민주노총 임원 산별대표자회의
- 12.26 •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한국노총에 IMF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의회 구성 요청
- 12.27 •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민주노총에 노사정협의회 참여 요청

1998

- 1. 7 • 한국노총, 노사정협의회 불참 선언

-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및 전국단위 노조대표자수련회(속리산 1.7-1.8)
- 1. 8 • 민주노총, 15일 국회소집-금융산업정리해고 법제시 총파업 포함하여 총력투쟁 전개 천명
- 1.13 •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5대재벌 회장과 조찬회동,
-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 불참 천명
- 1.14 • 노사정위원회 구성 전격합의-국민협약 제정 합의, 고용조정문제 논의 시작
- 1.15 • 노사정위원회 공식발족
- 1.19 • 노사정위원회, 논의과제 10개선정 및 만장일치 일괄처리 방식 확정
- 1.20 • 노사정위원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노사정공동선언문 1채택
- 노동부장관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 담화문 발표
- 1.31 • 민주노총, 임시국회 강행처리 기도

- 에 항의하여 노사정위원회 불참
2. 2 •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회 10차, 기초위원회 7차 회의-총 104개 논의사항중 71개 합의, 쟁점 24 개, 9개 2차과제 도출
- 한국노총 민주노총, 고용조정 법제화 등의 강행처리 보도에 항의하여 회의 불참,
- 2월 임시국회 개회
2. 3 •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정리해고법 안 상정시 6일 2일간 시한부 총파업 결정
2. 4 • 노사정위원회 제9차 기초위원회, 105개 중 61개 합의, 33개 쟁점, 11개 2차과제.
- 국민회의측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전향적 대안 제시 시사(전교조, 실업자조합원자격, 실업기금 1조원, 산별교섭, 경영참가 등)
- 민주노총 투쟁본부대표자회의, 국민회의 당사 점거 농성
- 재벌개혁과 고용안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23개 시민사회 종교단체 참가)
2. 5 • 민주노총 투쟁본부 대표자회의, 노사정 협상팀에 노동기본권 확보시 정리해고 파견근로 제논의 위임
2. 6 • 노사정위원회 '경제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2' 채택(노사정합의)
2. 9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노사정합의
- 추인 부결-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구성 재협상요구 총파업선언
2. 11 • 서울 지하철공사, 노조상대 손해 배상청구 소송 취하, 노동조합 12일 총파업 철회
2. 12 •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총파업 철회 결정
2. 13 • 대우조선 조합원 정리해고 반대 분신 투신자살
2. 14 • 노동관계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국회통과
2. 15 • 민주금속연맹 자동차산업연맹 현총련 통합대회(위원장 단병호 조합원 184개노조 190,742명)
2. 18 • 한광육 노사정위원장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 보고후 노사정 합의안중 법제화 안된 부분 (실업자노조가입, 파견근로자 범위, 교원의 단체교섭권 등)재법제화 방침 발표
3. 31 •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2기 집행부 출범(위원장 이갑용, 사무총장 고영주)
4. 16 •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대정부 직접협상 방식 결정
5. 1 •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 시위(35,000명 참가, 연행 폭행사태 발생)
5. 7 • 고용 실업대책,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 본부 출범(50여 민중 시민 사회 종교단체 참가)

5. 16 • 민주노총, 5.18정신계승 고용안 정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서울 종묘공원)
- 민주노총 대정부 직접협상 공개 제의
5. 20 • 민주노총 11차 대의원대회서 5 대 요구안 제시하고 5.6월 총파업 투쟁방침 확정
- (5대요구안)**
- ①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철폐 및 부당 노동행위 근절
  - ②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 ③ 고용 실업자대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④ 절경유착근절과 재벌해체 노동3권보장 노동자 경영차가
  - ⑤ IMF재협상
5. 23 •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고용안 정쟁취를 위한 공공노동자 총력 투쟁결의대회(서울, 울산 대구, 부산)
- 민주노총 청와대에 5.26 24시 시한부 직접협상 촉구
5. 24 • 새정치국민회의 관계자 민주노총에 협상 타진→5.26 민주노총 노사정위 협상(1차 노정 협상 개시)→5.27 결렬
5. 25 • 경총, '민주노총 불법파업 움직임에 대한 경영계 지침' 발표
5. 27 • 민주노총 총파업(132개 노조 12만 4천명 참가)
- 동아엔지니어링 전노조위원장
- 신길수 자살
5. 28 • 민주노총 총파업( 109개 노조 111,632명 참가)
- 정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사과하고 2차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와 협상은 없다고 언명
5. 29 • 대검 공안부, 총파업 주도 민주노총 노조간부 143명 업무방해로 입건 엄단 지시
- 민주노총 산별대표자 지역본부장 회의, 6.10 총파업 총력투쟁 확인 결의
  - 기아자동차 송인도 조합원 분신, 주간 근무조 파업 돌입
5. 30 • '고용 실업대책 마련과 재벌개혁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제1차 국민대회'
- 민주노총, 정부의 즉각 협상 촉구 성명
5. 31 • 민주노총 "김대통령 미국방문 외교에 최대한 협조 가능" 성명
- 민주노총 노사정위(노정협상) 2 차 협상 시작
6. 1 • 한국노총 중앙위원회, 공공 금융 구조조정 중단, 중앙노정협의에 의한 민주적 합리적 구조조정 추진 요구, 제2기 노사정위원회 참가 결정
- 기아자동차노조, 체불임금지급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 돌입
6. 2 • 노정 3차협상, 정부측 협상안 제시, 6월 3일 결렬

- 금속산업 연맹,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철폐를 재논의로 수정 결의
  - 민주노총 산하 10개 사무직연맹 6.10 총파업 참가 결의
6. 3 • 제2기 노사정위원회 출범(위원장 김원기)
-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불참 재확인, 교섭 및 6.10 총파업결정권 집행부에 위임
  - 서울지하철노조, 차별임금정책 개선 요구 결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72.1%찬성), 6.11 파업 돌입 예정 천명(파업 13시간만에 6.11 타결)
6. 4 • 전국동시 지자체 선거
6. 5 • 현대자동차노조, 민주노총 지침 따라 6.10 총파업 돌입 확정
- 민주화학, 전국단위노조대표자 회의서 총파업 동참 결의
  - 노정 4차협상 재개, 노정 합의
- 〈합의사항〉**
- ①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에 대하여
    - 정리해고 파견제와 관련하여 노사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남용방지에 필요한 제반방안을 논의한다.
    -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고용보험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노사정 위원회에서 논의 보완토록 한다.
    - 파견제 시행에 있어서 기존 근로자의 고용불안 및 노조활동침해 방지에 적극 노력한다.
  - ②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정근로시간 및 실근로시간 단축, 이와 관련된 임금조정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마련한다.
    - 법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2000년부터 업종별 규모별로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의 '근로시간조정지원금' 등 지원방안과 재원규모 확충문제를 적극 추진한다.
  - ③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대하여
    - 정부는 노사정 신뢰구축을 위해 경제위기를 틈타 확산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조속히 근절하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는 엄단한다.
    - 특히 그간 제기 조사된 사건 중 법 위반이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포함하여 신속 엄정히 조치 해결토록 노력한다.
    - 노사정 공익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당노동행위특별대책위'를 설치한다.(정부대표로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관계기관이 참여토록 한다. 대책위의 조사활동에 노사공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임금체불문제도 특위에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④ 산업·업종별 교섭관련
    - 노조조직과 교섭체계의 산별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 마련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노사정위 안에 설치한다.

- 정부는 주요업종 산업의 고용안정 및 현안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발전적 협의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노사정위에서 산업별 업종별 노사단체간 '간담 협의회'가 정례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 공공부문 구조조정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사정위원회 안에 관계부처, 관련 노사단체 및 공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공부문 특별분과위 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개별기업의 노사간의 협의를 지원한다.
- ⑤ 노사정위원회 위상관련
-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위기 극복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기구가 되도록 운영한다.
-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설명한다.
- 기타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위에서 협의하여 추진한다.
- ⑥ 실업대책에 대하여
- 정부는 2000년까지 사회적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추진, 소요재원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의 탄력적 운용, 세제개편 등 다양한 조치 강구)
- 종합적인 실업대책의 점검 보완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논의 추진한다.
- ⑦ IMF재협상관련
- 정부는 IMF와의 분기별 추가협의 결과를 노사정위에 설명하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율, 금리, 시장개방 등에 관한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 정부는 IMF와의 협의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의 재원확충 등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마련에 노력한다.
- 정부는 노사가 요청할 경우 IMF와의 대화를 주선한다.
- ⑧ 노동기본권에 대하여
- 정부는 99.7.1부터 교원의 노조결성권이 보장되도록 98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며 98년 정기국회 이전 까지 구체적 방안을 노사정위 등에서 논의 마련한다.
- 정부는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을 인정하는 법률의 개정안을 98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문제, 필수공익사업 범위문제, 경영참가법 제정문제, 4대사 회보험 통합관리 및 대표 참여확대문제를 논의한다.
- ⑨ 현안문제
- 현대자동차 등 정리해고사업장문제, 삼미특수강문제 등
- 민주노총 산별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 총파업 철회 결정
6. 8 • 노동부, 5월 말 현재 체불임금 2,960개 사업장, 16만6,495명에 6,235억원으로 사상최고라고 발표
- 울산 송원산업노조, 노조인정 체불임금 청산 성실교섭 요구 무기한 파업 돌입

- 금융노련 전국회원조합대표자회  
의, 은행간 인수 합병 대응투쟁  
방침 확정
6. 10 • 민주노총 12차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참여 결정(402명  
중 208명 참석)
- 대전성모병원, 노조사무실 출입  
해고자 폭행
6. 18 • 정부 55개 퇴출기업 발표
6. 24 • 현대자동차노조, 희망퇴직 실시  
조건 합의
- 민주노총, 4월말 현재 실제실업  
자 365만 넘는다고 발표
6. 29 • 5개은행 퇴출 발표
- 양대 금융노조 명동성당 농성 돌  
입
  - 김대중대통령 5대재벌총수들과  
대담
  -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4,830명  
신고
6. 30 • 현대자동차 시한부 전면파업 돌  
입
7. 1 • 인천제철노조 임금삭감 구조조정  
반대 파업돌입
7. 2 • 한국노총, 민주적 구조조정, 고용  
승계 의무화, 강제 퇴출 방침 철회,  
노동자 사법처리 중지 요구,  
15일 금융총파업 이후 공공부  
문→전산업 총파업 전개 천명
- 노동부, 민주노총 설립신고 반려
  - 민주노총 구속노동자 석방 수배  
자 해제 촉구 성명(구속자 19,
- 불구속기소 22, 소환장 발부  
326명)
7. 3 • 양대 금융노조, 일방적 금융산업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쟁취  
결의대회(명동성당)
- 정부, 한통 등 11개 공기업 민영  
화계획 발표
  - 부산지하철 파업돌입, 경찰 조합  
원 500명 연행
7. 4 •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고용안정  
보장, 부당노동행위 척결 탄압  
중단 촉구대회
- 김대중대통령, 전경련 회장단 회  
동
7. 6 •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IMF체제  
하의 정세전망과 민주노총의 대  
응방안)
- 현대자동차노조 2차 시한부 파업  
돌입, 경찰 노조간부 14명에 체  
포영장 발부
7. 7 • 정부 차관회의, 병원노련 파업을  
불법 규정, 엄정대처 결의
- 경총 30대그룹 인사노무담당 임  
원회의, 정부에 15일 총파업에  
대한 법집행 촉구, 고용 승계에  
대한 정부의 간접 자체 요구
  - 대우자동차노조 부분파업돌입
7. 8 • 민주노총 12차 중앙위원회, 15일  
기점으로 산하조직 투쟁집중 등  
총력투쟁계획 수립
- 〈투쟁 요구〉**
- ① 강제적 구조조정 중단 및 정리해고 금지

- ②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③  
 산업별 차원 고용안정협약 체결 ④부당노동 행위 근절 및 악덕사업주 구속, 노동절 총 파업 탄압 중단 ⑤임금체불 청산, 임금삭감 중단, 단협 개악 및 일방해지 중단  
 산업연구원, 1/4분기 한국노동자 임금이 9년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발표
7. 10 •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동기자회견, ①노사정 합의를 통한 올바른 구조조정, ②탈법적 정리해고 중단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③일방적 임금삭감 및 단협해지 중단, ④대등한 사회 협약기구 위상정립을 위한 총체적 지원방안 강구 및 노사정위 특별법 제정 등 수용 때까지 노사정위원회 철수 불참 선언  
 • 서울대 병원 파업후 노사합의  
 • 한국통신 등 10대 공기업노조협의회, 민영화 계획 반대 15일 총파업 돌입 선언  
 • 국무총리서리 주재 노동관계장관회의, 노동계 연대파업에 공권력 투입 방침 결정
7. 12 • 한국노총 민주노총 '생존권 사수 전국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공동집회
7. 13 • 민주노총 산별대표자회의, 총력 투쟁계획 논의
7. 14 • 금속산업연맹 파업 돌입 (26개 노조 57,000명 참가)  
 • 김대중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정리해고는 합의 사항이다. 불법파업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대처' 친명
- 금융노련, 15일 파업돌입 참정유보 결정
  - 부산지하철노조(파업12일째) 파업철회 현업복귀
7. 15 • 금속산업연맹 파업 계속, 공익 한국통신 등 파업 합류(68개 노조 151,637명 참가)  
 • 검찰, 금속산업연맹 단병호 위원장, 현대자동차노조간부 14명, 인천지역 노조간부 15명 등에 체포영장 발부
7. 16 • 민주노총 총파업 단행(32개 노조 78,012명 참가)  
 • 검찰, 민주노총 파업관련 86명에 우선검거 명령
7. 18 • 경찰, 고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연행  
 • 김우중 회장, 전경련 제12회 최고경영자하계세미나에서 '고용조정은 경기가 좋아진 후로 미루고 가능한한 실업발생을 억제해야 한다'고 발언
7. 20 •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2,995명 통보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7.23 총파업의 선결과제 결정  
**〈선결과제〉**  
 ① 경제 파탄책임자 처벌 청문회 소집, ② 강제적이고 반민중적인 구조조정 중단, ③

- 경제 파탄 책임자 처벌때까지 정리하고 종단, ④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 때까지 노동자 탄압 중단
7. 20 •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명동성당 800명) 7.23 총파업결의
7. 21 • 국회의원 보궐선거
7. 22 • 김원기 노사정위원장, 민주노총에 노정협상 제의
7. 23 • 노정대표단 협상 합의  
〈합의사항〉
- ① 공공 금융부문 구조조정(7.27합의)  
정부는 향후 금융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 성실히 협의토록 하며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에 필요한 시간과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 ② 청문회의 개최  
경제파탄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청문회 필요성을 공감하고 노시정 위원장은 이를 위해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 ③ 부당노동행위 근절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월별로 사법처리 결과를 발표한다.  
사용자의 불법이 명확하여 노동부가 사법 처리(구속 등)를 품신한 사업장에 대해 조기에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다.
- ④ 퇴출금융기관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대책  
위원장이 5개 퇴출은행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또는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당의 협조를 받아 조기에 원만한 해결이 될수 있도록 한다.

도록 한다. 동시에 금융산업 발전 특위에서 최우선과제로 다루어 조기에 매듭짓도록 한다. 아울러 고용승계 되는 대상은(선정기준, 원칙, 인원규모 등) 노사협의하여 (위임시 상급단체 포함) 선정한다.

⑤ 퇴출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대책  
정부는 55개 퇴출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및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고용 대책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

⑥ 정리해고문제의 평화적 해결(7.27합의)  
정부는 현대자동차 등 정리해고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재교육 등 다양한 해고회피방법을 모색하여 노시간에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우선 처리한다.

⑦ 장기 미해결사업장 문제  
삼미특수강문제에 대해서는 포철계열사에 취업시키고 관련 재판이 끝난 후 결과에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면 창원특수강으로 취업시킨다.

⑧ 고용창출 및 실업대책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안정대책  
노사정위원회는 종합적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를 특별히 다루도록 한다.

⑨ 노동계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문제  
노사정위원회는 정부가 사법처리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⑩ 노사정위원회 위상강화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법

- 제정을 추진하고 양노총위원장이 적극 협력한다.
7. 23 • 한국노총 산별대표자 간담회, 노정 합의안 평가  
 • 민주노총 총파업 유보  
 • 경총 노사정위원회 불참 천명
7. 25 • 노동부 신송면 국장 노정합의에 법률적 기속력 없다는 내용 발표
7. 27 • 정부 재계 5대그룹 조기 빅딜 합의문 발표  
 •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 복귀 선언
7. 29 • 정부 19개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 공개  
 • 전경련 경총,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  
 • 한국노총, 현대자동차 사용자는 노조와의 협상에 성실히 응하라 성명서 발표, 진상조사 단파견
7. 30 •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 복귀
8. 7 • 정부 재계 2차간담회
8. 14 • 민주노총 노정합의 이해 촉구결의대회(명동성당)
8. 17 • 만도기계노조, 고용안정협정 이행요구 코 전면파업 돌입
8. 24 • 현대자동차 노사합의
8. 25 • 검찰, 정리해고는 교섭대상 아니라고 발표
8. 27 • 민주노총, 구속노동자가 김영삼 정권보다 많다고 발표(총 216명 구속 수배)
8. 29 • 노동부장관, 경제5단체장과의 회동에서 노사문제 '당사자 자율해결원칙' 합의  
 • 만도기계노조 황성근 위원장 연행 구속
9. 1 • 현대자동차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노사참정합의안 부결(총 조합원 28,521명, 투표자 26,932명, 찬성 9,360, 반대 17,123)  
 • 조폐공사노조, 일방적 임금삭감 등에 항의 시한부 전면파업 돌입, 공사측 직장폐쇄 단행
9. 2 • 전교조 해직교사 125명 복직 결정  
 • 만도기계에 공권력 투입
9. 3 • 전경련, 5대그룹 7대 업종 사업구조조정방안 발표
9. 7 • 공공연맹, 공익노련, 민철노련 통합 합의 발표
9. 9 • 김호선 한국통신노조 위원장 등 3명 구속
9. 11 •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수련회(속리산) ♦